

# 사회신뢰의 결과와 원인

이동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2013년 8월

## I. 서론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알려진 사회 신뢰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고 사회협력을 촉진하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단위에서 연구되는데, 경제학 분야에서는 특히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예를 들면 사회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시장, 조직, 정부 등 각종 사회제도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된다(Algan and Cahuc 2010; Coleman 1990; Knack and Keefer 1997; La Porta et al. 1997). Arrow(1972)에 따르면, 일정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는 신뢰를 필수요소로 한다. 신뢰는 특히 계약이행을 감시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

기존 문헌은 사회신뢰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변수로서 법제도, 자발적 단체 활동, 소득, 소득불균형 등에 주목한다(Levi 1988; Knack and Keefer 1997; Jackman and Miller 1998; Putnam 2000; Rothstein 2000; Uslaner 2002; Bjørnskov 2006; Rothstein and Stolle 2008). 하지만 국가별 신뢰 자료를 이용한 최근 실증연구들은 전통적인 원인변수인 법제도나 네트워크 활동의 유의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 한다(Uslaner 2002; Bjørnskov 2006; Bjørnskov and Sønderskov 2011). 그 이유는 법제도에 대한 신뢰나 단체내부의 신뢰는 사회 신뢰와 기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제4장)을 통해 법제도와 단체 활동이 사회 신뢰에 주는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복잡한 경로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법제도는 소득수준을 통해, 단체 활동은 소득불균형을 통하는 매커니즘으로 사회 신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법제도나 단체 활동이 신뢰에 미치는 의미 있는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사회 신뢰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사회 신뢰의 원인에 대한 기존 이론을 살펴본다. 제4장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실증분석모형을 설명하고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제5장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사회적 자본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

신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존연구는 대부분 이론보다는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이 주를 이룬다. 즉, 신뢰와 결정변수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기존문헌은 이를 주로 실증적인 문제

(empirical matter)로 여긴다.

첫째로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문헌이 있다(Knack and Keefer 1997; Zak and Knack 2001; Guiso, Sapienza, and Zingales 2006; Algan and Cahuc 2010). 관련 연구의 시작인 Knack and Keefer(1997)는 29개 국가의 세계 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해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성장률이 1%p 가까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의 한계는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신뢰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역의 인과관계 가능성에 있다. 신뢰 데이터는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부터 구축되었고 시계열상으로 수치에 큰 변화가 없어 패널분석도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lgan and Cahuc(2010)은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미국 이민자들의 신뢰와 출신국가의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Algan and Cahuc은 개인의 신뢰 수준이 부모와 조부모 등 선대의 문화적 유산이라는 기존 연구에 주목했다(Putnam 2000; Guiso, Sapienza, and Zingales 2006). 예를 들면, 1950년대 이탈리아에서 이민해 온 가족에서 태어난 후손들의 1980년대 신뢰 수준을 이용해 이민당시 이탈리아의 신뢰수준을 추측할 수 있다. Algan and Cahuc은 이러한 방식으로 20세기에 걸쳐 24개국의 신뢰수준에 대한 자료를 구축했고, 미국 이민자 후손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신뢰가 본국의 경제성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Guiso, Sapienza, and Zingales(2006)는 신뢰가 경제성장의 핵심인 금융시장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이들은 이탈리아의 9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신뢰 수준이 금융자산 보유 행태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sup>1)</sup> 예를 들면, 주식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관리 하에 두지만 원금에 대한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이탈리아 남부와 같은 저신뢰 지역에서는 북부 지역보다 가계 주식 보유 비중이 낮았다. 은행예금의 경우에도 예금자산에 대한 통제력이 일정 부분 상실되기 때문에 저신뢰 지역에서는 발달하기 어렵다. 결국 불신감이 강한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현금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신뢰가 적은 남부 지역에서는 기업 소유권이 창업자 가족 등 소수 주주에 집중되는 중소기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는 창업주와 잠재적 주주들의 관계에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신뢰가 높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상장 대기업이 발달했다.

물론 더 흥미로운 질문은 신뢰가 어떤 경로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가이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신뢰가 거버넌스 등 제도의 품질을 제고해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컨센서스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문헌은 한 사회의 신뢰수준이 부패, 법제도, 계약실현성, 공공재의 질적 수준, 행정부의 정치적 독립성, 정부기관의 효율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Putnam 1993, 2000; La Porta et al. 1997; Zak and Knack 2001; Rothstein and Stolle 2008; Uslaner 2002; Bjørnskov 2010). La Porta et al.는 정부, 대학, 대기업 등 규모가 큰

---

1) 이동원 외(2009)의 Guiso, Sapienza, and Zingales에 대한 설명을 참조.

단체일수록 구성원 간 협력을 위해 신뢰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가족이나 동업 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많은 소규모 단체의 경우 신뢰가 적을 경우에는 평판이나 미래의 처벌 가능성이 이를 대체할 여지가 크다. 반면 정부기관의 경우 관료 간 혹은 관료와 시민 간 상호작용이 드물기 때문에,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협력을 위해 사회신뢰가 필수적이다. La Porta et al.는 40개 국가 샘플을 이용한 횡단면 연구에서 정부효과성, 시민단체 참여율, 대기업 규모 등으로 측정된 대규모 단체의 성과에 신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La Porta et al.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신뢰 연구의 취약점인 내생성, 즉 역의 인과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Bjørnskov(2010)의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뢰가 부패, 법제도의 품질 등 거버넌스로 연결되는 이론적인 메커니즘을 최초로 제시했다. Bjørnskov는 신뢰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의 부패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이론에 기초한 모럴 비용(moral cost)을 주인-대리인-고객 모형에 대입시켜 관료주의 메커니즘을 모형화했다. 정부 고위관료는 정부서비스 업무를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기업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업에게서 뇌물을 받는 공무원은 (모두가 지키기를 기대하는) 사회계약을 여기는데 따르는 잠재적 모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모럴 비용의 강도는 사회구성원들이 기대하는 사회계약의 이행 정도, 즉 평균적인 사회신뢰 정도에 달려있다. 즉, 속을 위험이 높은 저신뢰 사회일수록 뇌물을 받는데 따르는 모럴비용은 낮아진다. 또한, Bjørnskov는 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거버넌스 수준을 요구하는 투표자들의 수요에 정부관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Bjørnskov는 109개국 샘플을 분석해 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거버넌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Bjørnskov (2006, 2010)는 내생성 문제를 계량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변수를 사용했다(법의 기원, 군주제 더미, 언어가 인칭대명사를 생략하는 지 여부, 1년 중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

Bjørnskov를 포함한 관련 문헌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회 신뢰와 거버넌스 자료는 <표1>과 같다.

<표1> 사회 신뢰와 거버넌스 변수와 내용

변수	내용 및 출처
사회 신뢰	“일반적으로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중 Source: World Values Survey, LatinoBarometer, AfroBarometer, East Asia and Asian Barometers
거버넌스 지표	시민참여,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정치적 안정성, 규제품질, 부패관리 등 6개 지표를 -2.5~2.5의 범위로 추정 Source: Kaufmann et al. (각 년도)

민주주의 지수	Polity IV democracy: -10(완전독재)~10(민주주의) Source: Polity IV Project
정치적 권리	1(완전한 정치적 권리)~7(권리 없음) Source: Freedom in the World, Freedom House
법제도 품질	법과 제도가 개인 소유권을 보호하는 정도. 1(소유권 보호 부재)~10(완전보호) Sourc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부패인식 지수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함. 범위: 0~10.

참조: 이동원 외.(2009), Bjørnskov(2006, 2010).

사회 신뢰는 제도의 품질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재정 등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면, 사회 신뢰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인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Torgler and Schneider 2007; D'Hernoncourt and Méon 2011; Lee 2013). 물론, 대부분 기존연구는 실증연구에 국한되며, 신뢰에서 지하경제 규모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D'Hernoncourt and Méon(2011)이 지적한대로 사회 신뢰는 일반적으로 납세의욕을 제고해 지하경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높은 신뢰수준이 공식적 계약관계를 대체하면 비공식 지하경제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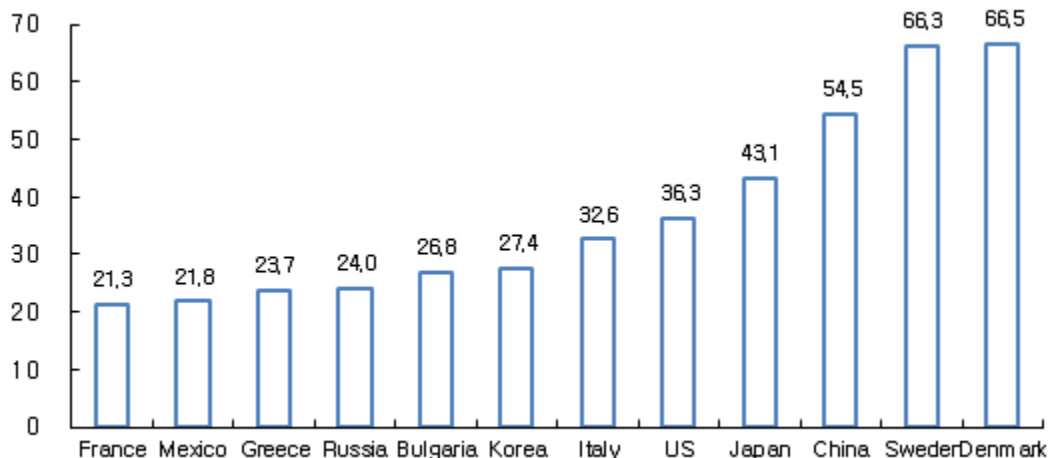
Lee(2013)은 Bjørnskov(2010)가 제시한 사회신뢰-거버넌스 연결고리를 이용해 사회 신뢰와 지하경제간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sup>2)</sup> 구체적으로 Lee의 모형에서는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레비아탄(Leviathan) 정부가 지하경제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활동이 지하경제에 속할 확률, 법제도가 탈세를 적발할 확률, 사업가의 조세부담을 고려한다. 정부는 세금징수원에게 조세징수를 위임하고, 사업가는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로 숨을 수 있지만, 징수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 부패한 징수원은 뇌물을 받고 탈세를 눈감아줄 수 있으나, 발각되면 부패징수원은 실직하고 사업가는 원래 내야할 세금은 물론 벌금을 추가로 지불한다. 사업가가 지하경제로 숨을 가능성은 세금과 벌금 뿐 아니라, Bjørnskov식 모럴 비용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Lee 모형의 결과는 부패수준을 결정하는 모럴 비용이 지하경제 규모를 간접적으로 결정함을 보여준다. 즉, 높은 수준의 사회 신뢰는 지하경제 활동에 참여하는데서 오는 모럴 비용을 높임으로써 지하경제 규모를 감소시킨다.

2) Lee(2013)의 모형을 설명한 부분은 『이동원·민희철 (2013). 세제와 경제주체의 상호 작용. 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하였음.

### Ⅲ. 사회 신뢰의 원인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뉴욕시를 여행하던 한 덴마크인 엄마는 식당 주변 도로에 자신의 아이를 유모차에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이는 북유럽에서는 흔한 일이다(Zak and Knack 2001). 이스라엘에서는 놀이터 등에서 어른들이 남의 아이를 함께 돌보는 일이 사회규범인데, 이 같은 일은 미국 디트로이트 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Coleman 1988).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는 1990년대 세계 주요 도시에 50달러 상당의 현금과 연락처가 들어있는 지갑들을 무작위로 뿌렸다. 이 실험에서 현금과 함께 연락처로 돌아온 지갑의 비율은 노르웨이(Oslo)의 100퍼센트에서 이탈리아(Ravenna)의 20퍼센트까지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스웨덴인의 70퍼센트가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페루에서는 7퍼센트만이 남을 신뢰한다. 주요 국가별 평균 신뢰수준은 <그림1>과 같다.

<그림 1> 주요국의 사회신뢰



출처: World Values Survey, Wave 4 (1999~2004)

이 같은 사회 신뢰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기존 문헌들은 사회 신뢰의 기원에 대해 많은 이론을 제시하지만, 이중에서 공식적 제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Stolle 2003). 제도적 접근 방식은 법제도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데 따르는 위험비용을 감소시켜 신뢰를 제고한다고 본다(Levi 1988; Hardin 1992; Knack and Keefer 1997; Jackman and Miller 1998; Rothstein 2000; Rothstein and Stolle 2008). 정부가 법과 계약을 효율적으로 집행할수록 국민들은 부정을 당했을 때 보호받기 쉽기 때문에 타인을 더 신뢰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제도적 요인이 사회신뢰를 증진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사회신뢰가 법의 지배, 행정부 제약, 계약실행성, 정부조직의 정치

적 독립성 등 제도적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Knack and Keefer 1997; Zak and Knack 2001; Rothstein and Stolle 2008). 하지만, 대부분 연구는 사회 신뢰가 오히려 법제도의 국가별 격차를 설명하는 역의 인과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가설은 사회 신뢰의 원인이 자발적 단체 활동을 통한 수평적 사회관계에 있다고 본다. 단체 활동은 면대면 상호관계를 촉진시켜 서로 신뢰하는 환경을 만든다(Putnam 1993; Brehm and Rahn 1997; Stolle 2003). 하지만, 단체 내에서 형성되는 신뢰가 일반적 신뢰로 이어진다는 실증적인 근거는 드문 편이다(Delhey and Newton 2003). 반면, Bjørnskov(2006)에 따르면 단체 활동과 사회 신뢰간 상관관계는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단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들 두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신뢰를 오인하는데 있다. 즉, 사회적 자본 문헌은 사회 신뢰를 제도에 대한 신뢰 또는 특정 그룹 내 신뢰와 혼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식적 제도나 단체활동이 직접적으로 사회 신뢰로 전이된다는 증거는 약한 편이다(Uslaner 2002; Bjørnskov 2006; Bjørnskov and Sønderskov 2011).

이 외에도 사회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변수는 다양하다. Bjørnskov(2006)은 7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신뢰도를 결정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Bjørnskov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와 결과는 <표2>와 같다. Bjørnskov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신뢰를 결정한다고 알려진 많은 변수 중 단 몇 개만이 실증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2> 신뢰를 결정하는 변수와 분석결과

변수	결과
소득불균형	(-) Significant
민족다양성	0
구공산권국가	(-) Significant
가톨릭교 비중	(-) Significant
이슬람교 비중	(-) Significant
군주제	(+) Significant
인당 GDP	0
개방도	0
법의 지배	0
민주주의	0
교육수준	0
경제성장률	0
정치적 권리	0
연령 구조	0
인구 규모	0

참조: Bjørnskov (2006).

주: 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대부분의 사회적 자본 연구들은 국민들 간 사회적 거리를 벌리는 소득불균형을 사회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분명한 변수로 규정한다(Knack and Keefer, 1997; Uslaner, 2002). 비슷한 맥락에서 민족그룹 간 갈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민족다양성도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종교 역시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일반적으로 가톨릭, 이슬람 등 수직적인 종교는 수평적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신뢰형성을 저해한다(La Porta et al. 1999; Zak and Knack 2001; Uslaner 2002).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을 지지하는 가톨릭이나 이슬람교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강해 표용성이 적은 문화를 유발한다(이동원 외 2009). 예를 들면, 15세기 이후 가톨릭교회들은 교세유지를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여행과 교육을 제한하고 서적을 검열하기도 했다(La Porta et al. 1999 [이동원 외 (2009)에서 재인용]).

구 공산권 국가들은 독재정권 시기 정부의 탄압적인 행동이 신뢰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루마니아 Securitate, 구소련 KGB, 동독 Stasi은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전략으로 사회 신뢰를 추락시켰다. 반면, 군주제 국가에서는 왕실이 정치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화합의 상징적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군주제의 긍정적 효과는 인종, 민족, 종교가 다양한 사회일수록 커진다.

놀랍게도 Bjørnskov의 분석에서는 그동안 사회신뢰의 필수적 요인으로 알려진 많은 변수들(소득, 교육, 개방도, 법의 지배, 민주주의, 연령, 인구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들 변수들은 그동안 내생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소득은 신뢰의 원인과 결과로 동시에 작동한다. 예를 들면, 고소득층일수록 타인을 믿는데 따르는 위험부담을 더 감수할 수 있다. 교육수준 역시 신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학생들이 가족이나 동료학생들의 도움을 얻기 쉬워 교육수준이 높아진다(Coleman 1988; Putnam 2000). Bjørnskov의 결과는 또한 공식적 제도 가설의 대표적인 변수들(법의 지배, 민주주의, 정치적 권리 등)이 강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Bjørnskov 연구의 교훈은 사회 신뢰의 원인에 대한 많은 가설이 심각한 내생성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관련문헌의 시급한 숙제라는 것이다.

## IV. 사회신뢰, 법제도, 사회적 네트워크

제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제도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신뢰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지만 실증분석에서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sup>3)</sup> 본 장은 1999~2008년간 79개국 샘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법제도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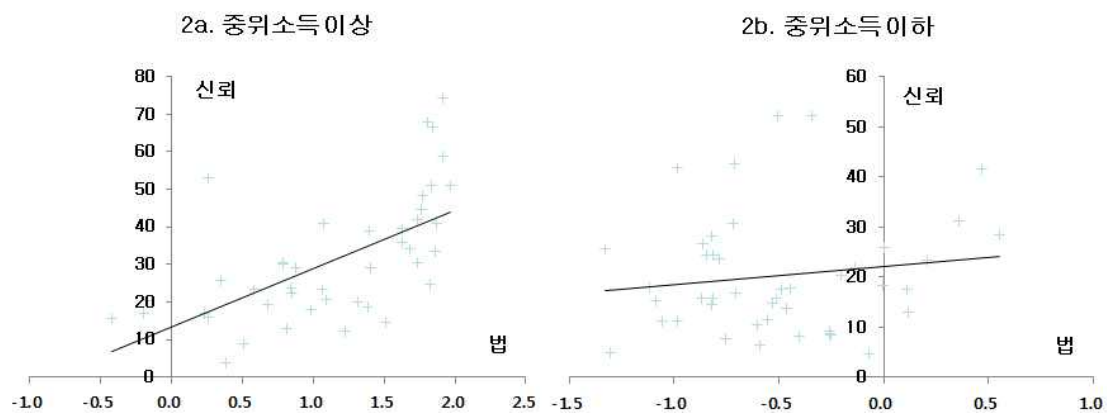
3) 본 장은 Lee and Song (2013)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영향이 단순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예를 들면, 법제도의 주요 지표인 법의 지배는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기 쉽고, 사회적 네트워크 지표인 단체 활동의 효과는 소득불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장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와 단체 활동에서 오는 신뢰가 사회신뢰로 전이되는 효과가 미약했던 원인을 밝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림 2a와 2b는 총 87개 국가를 인당소득 중위 값을 기준으로 나눈 두 개 그룹에 대해 법의 지배와 사회 신뢰 간 단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수평축의 법의 지배는 1996~2002년 평균이며, 수직축의 사회 신뢰 점수는 세계가치관조사의 Wave4 (1999~2004년) 기준이다.<sup>4)</sup> 그림에서 보듯이 법의 지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만 신뢰와 양의 관계가 있다. 저소득국가에서는 신뢰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며, 법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그림 2〉 인당 국민소득과 법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주: 소득은 GNI per capita (PPP, International dollar)임.

법의 지배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에서 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계약을 집행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는 성숙한 법적 시스템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도 공식적인 소유권 제도를 갖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de Soto 2000). 따라서 개도국의 사회 신뢰는 주로 사회관습 같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의 지배는 한 사회의 비공식적 규범인 사회계약을 잘 반영할 때만 효과적으로 작동된다(Knight 2001).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구공산권국가에서는 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공식적 법과 비공식적 사회계약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 한다(de Soto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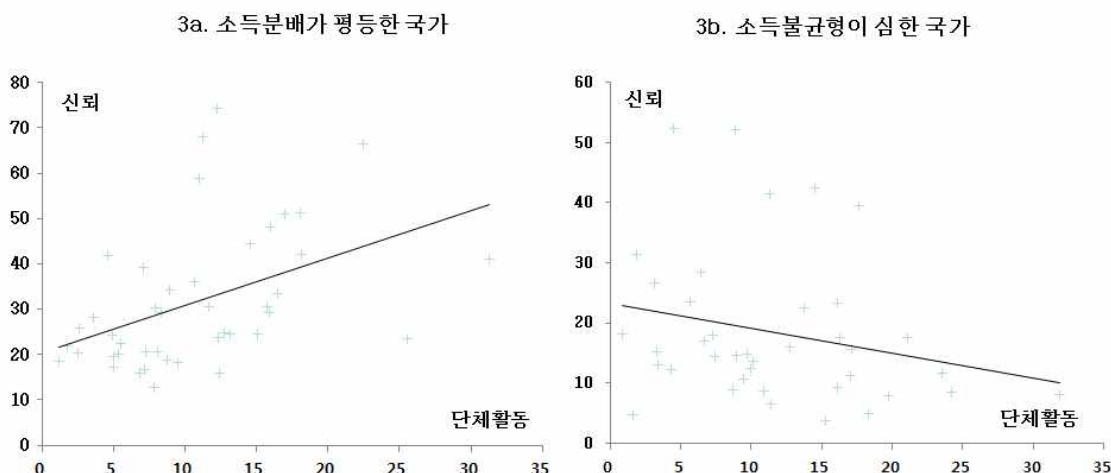
고소득 국가에서 법의 지배가 사회 신뢰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적 경쟁에 있다. Bjørnskov(2010)에 따르면, 사회 신뢰와 법의 지배 간 관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존재하는데, 이는 신뢰수준이 높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치인들이 질

4) 법의 지배 출처는 Kaufmann et al. (2008)임.

높은 정책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이다. Bjørnskov의 주장은 법과 신뢰 간 관계가 정치사회적 제도에 영향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3a와 3b는 총 83개 국가를 지니계수 중위 값을 기준으로 나눈 두 개 그룹에 대해 단체 활동과 사회 신뢰 간 단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단체 활동(수평축)은 각종 단체에 대한 평균 참여도로 세계가치관조사의 Wave 4와 5에서 제공하였다. 소득분포가 비교적 균등한 국가에서 단체 네트워크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소득분포가 불균등한 국가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이 신뢰를 오히려 감소시킨다.

〈그림 3〉 소득분배와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연구들은 단체 활동이 수평적 관계 형성, 부정활동 억제, 정보공유 발달 등의 경로로 사회 신뢰를 증진한다고 주장하였다(Putnam 2000; Kinght 2001; Fafchamps and Minten 2000). 하지만, 이들 연구는 단체 내에서 형성된 신뢰가 일반적인 사회 신뢰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밝히지 못했다. 많은 종류의 단체들은 경쟁단체들을 견제하고 불신함으로써 생존하는데, 단체 회원들이 소속된 단체 안에서만 ‘호혜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을 공유할 경우 사회신뢰를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Kumlin and Rothstein 2005; Knack 2003).

## 1. 계량분석: 모형과 데이터

법제도와 단체활동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S_i = \beta_0 + \beta_1 L_i + \beta_2 M_i + \beta_3 (L \cdot M)_i + \Phi X_i + \epsilon_i \quad (1)$$

$$S_i = \gamma_0 + \gamma_1 K_i + \gamma_2 H_i + \gamma_3 (K \cdot H)_i + \Pi X_i + \mu_i \quad (2)$$

여기서  $S_i$ 는 국가  $i$ 의 사회 신뢰 수준,  $L$ 은 법의 지배 수준,  $M$ 은 소득,  $K$ 는 단체 활동 수준,  $H$ 는 소득불균형이며,  $X$ 는 통제변수의 벡터를 나타낸다.

식(1)과 (2)에서 도출할 수 있는  $L$ 과  $K$ 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다.

$$dS/dL = \beta_1 + \beta_3 M \quad (3)$$

$$dS/dK = \gamma_1 + \gamma_3 H \quad (4)$$

식(3)과 (4)의 한계효과들은 각각 소득수준과 소득불균형 정도에 달려있다. 앞부분의 이론적 설명에 따라  $dS/dL$ 은 고소득 국가에서 양의 부호를,  $dS/dK$ 는 소득불균형이 심한 국가에서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데이터는 <표 3>과 같으며 요약통계는 부록 <표 A1>과 같다.

<표3>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내용

변수	내용 및 출처
사회 신뢰	‘일반적으로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 Source: World Values Survey (Wave 4 and 5)
법의 지배	소유권, 계약집행 등 사회의 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범위: -2.5~2.5 Source: Kaufmann et al. (2008)
단체 활동	교육, 스포츠, 종교, 전문직 협회, 노조, 정치정당에 가입한 비중 Source: Polity IV Project
소득	인당 GDP Sourc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소득불균형	지니계수 Source: OECD, WIID2
교육	해당연령대 고등학교 등록률 Sourc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종교참여	가톨릭과 이슬람 인구비중 Source: La Porta et al. 1999
종교적 독실함	종교가 일상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응답한 비중 Source: Berggren and Bjørnskov (2011)
군주제	군주제 국가 = 1
구공산권	구공산권 국가 = 1

## 2. 분석결과

수식 (1)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4>과 같다.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모형 1~2에서 법의 지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모형 3에서는 법의 지배와 소득의 교차항이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하다. 즉, 법의 지배가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 국가에서 더 강건함을 알 수 있다.

<표 4> 법의 지배가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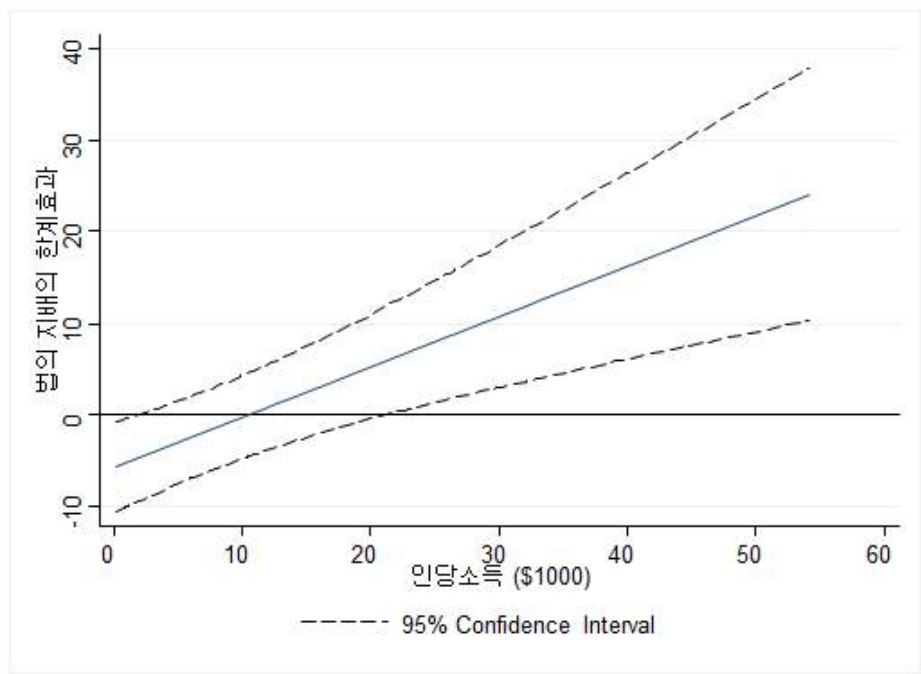
	1	2	3
법의 지배	-0.519 (2.261)	-2.182 (2.804)	-5.690** (2.467)
소득		0.250 (0.244)	-0.567* (0.286)
법의지배 × 소득			0.549*** (0.139)
지니계수	-0.605*** (0.181)	-0.577*** (0.184)	-0.462*** (0.169)
종교성	-0.192** (0.0839)	-0.171* (0.0903)	-0.153* (0.0845)
가톨릭	-0.0940** (0.0384)	-0.0916** (0.0382)	-0.0725** (0.0342)
이슬람	-0.0815 (0.0511)	-0.0728 (0.0520)	-0.0629 (0.0549)
교육	0.0449 (0.0639)	0.0262 (0.0658)	0.108* (0.0640)
군주제	8.794** (4.164)	9.102** (4.162)	6.745 (4.164)
구공산권	-12.28*** (3.677)	-10.59** (4.115)	-8.834*** (3.724)
상수항	62.83*** (8.342)	58.41*** (9.815)	49.59*** (8.661)
Obs.	79	79	79
R <sup>2</sup>	0.658	0.666	0.731

주: 1. 종속변수는 사회 신뢰임. 2. \*\*\* p<0.01, \*\* p<0.05, \* p<0.1. 3. 괄호는 white 방식의 robust standard error임.

소득수준에 따라 변하는 법의 지배-신뢰 간 한계효과는 <그림 4>와 같다. 95% 신뢰구간(점선으로 표시된 범위)이 0보다 크거나 작으면, 한계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예상한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법의 지배의 효과는 커진다. 한계효과 추정치는 전체 샘플의 51퍼센트에 해당하는 소득 \$10,000 이상 국가군에서 양의 값을 가지며,

샘플의 29퍼센트인 소득 \$21,000 이상 국가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서는 한계효과가 음으로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림 4〉 소득수준에 따라 법의 지배가 신뢰에 미치는 한계효과



〈표 5〉는 수식 (3)에 대한 추정결과이다. 모형 1~2에서 단체 활동의 효과는 양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모형 3에서 단체활동×지니계수의 계수는 음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이 사회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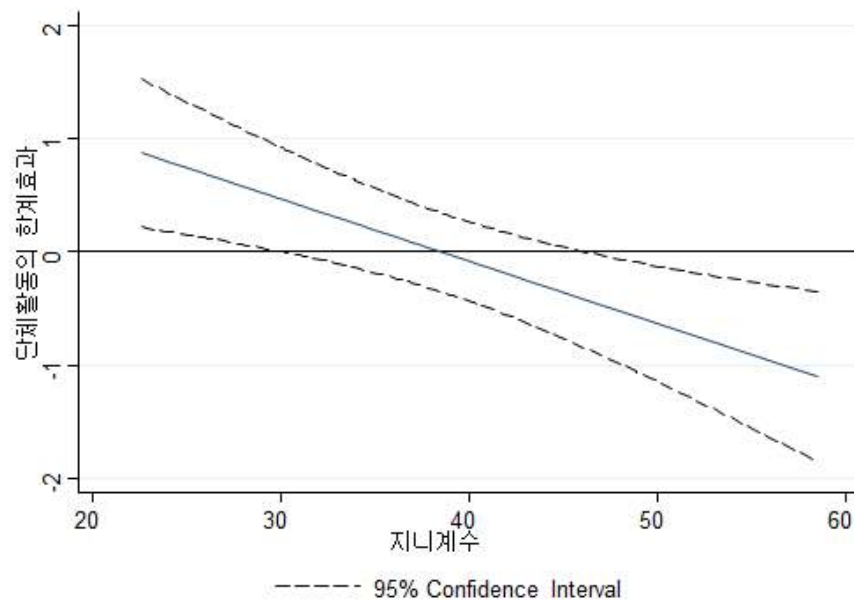
〈표 5〉 단체 활동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OLS)

	1	2	3
단체활동	0.257 (0.213)	0.142 (0.209)	2.111*** (0.684)
지니계수		-0.526*** (0.197)	0.159 (0.285)
단체활동×지니계수			-0.0550*** (0.0170)
소득	0.316* (0.171)	0.109 (0.181)	0.125 (0.256)
종교성	-0.218*** (0.0815)	-0.145* (0.0825)	-0.107 (0.0953)
카톨릭	-0.112***	-0.108***	-0.119***

	(0.0396)	(0.0378)	(0.0398)
이슬람	-0.0122	-0.0849	-0.120**
	(0.0579)	(0.0617)	(0.0544)
교육	0.0599	0.0758	0.0577
	(0.0719)	(0.0690)	(0.0694)
군주제	8.338**	8.392**	7.558*
	(3.730)	(3.565)	(3.808)
구공산권	-3.831	-8.824**	-7.394*
	(3.715)	(4.013)	(4.386)
상수항	30.87***	50.34***	25.43*
	(9.887)	(11.93)	(14.59)
Obs.	74	74	74
R <sup>2</sup>	0.652	0.687	0.711

주: 1. 종속변수는 사회 신뢰임. 2. \*\*\* p<0.01, \*\* p<0.05, \* p<0.1. 3. 괄호는 white 방식의 robust standard error임.

<그림 5> 소득불균형 정도에 따라 단체 활동이 신뢰에 미치는 한계효과



지니계수에 따라 변하는 단체활동-신뢰 간 한계효과는 <그림 5>와 같으며, 실선은 수식(4)의  $dS/dK$ 를 나타낸다. 한계효과는 상대적으로 소득분배가 균등한 국가에서 양의 값을 가지나, 소득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지니계수 30(슬로베니아 수준) 이하인 샘플의 27퍼센트에서 한계효과 추정값이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반면, 지니계수 45(우간다 수준) 이상인 샘플의 16퍼센트에서

한계효과가 0보다 작고 유의하다.

Bjørnskov and Sønderskov(2011)은 사회 신뢰가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나 단체 활동과는 일관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 장의 분석결과 역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법의 지배(제도에 대한 신뢰)나 단체 활동(특정 그룹에 대한 신뢰)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인당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소득 기반이 동질적인 국가에서만 유의했다. 다른 변수들 중에서는 소득불균형, 종교성, 군주제국가 더미, 구 공산권국가 더미가 사회 신뢰를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본 논문은 사회신뢰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 신뢰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 전반적으로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는 법제도, 단체 활동, 소득, 불균형 등 사회 신뢰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내생성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신뢰결정 요인인 법제도와 단체 활동의 한계효과가 국가별 소득수준과 소득불균형에 영향을 받음을 발견했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가진다. 경제발전, 빈곤억제, 그리고 중산층을 늘리는 것이 직접적으로 사회 신뢰를 증진하는 정책이다. 효과적인 법의 지배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활동 역시 경제사회발전을 통해 사회 신뢰 증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국가별 신뢰 비교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득분배를 신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따라서 소득재분배를 신뢰를 증진하는 핵심정책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은 필연적으로 세금인상과 복지지출 확대를 의미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소득계층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기 쉽다.

또한,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과 사회신뢰 간 ‘역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신뢰수준이 높은 국가의 정부일수록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득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재분배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세계최고의 신뢰수준을 가진 스웨덴의 조세 및 복지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회 신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신뢰와 결정변수 간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이동원 외. 2009. 『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Algan, Yann, and Pierre Cahuc. 2010. “Inherited Trust an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0: 2060-2092.
- Arrow, Kenneth J. 1972. “Gift and Exchang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4): 343-362.
- Berggren, Niclas, and Christian Bjørnskov. 2011. “Is the Importance of Religion in Daily Life Related to Social Trust? Cross-country and Cross-state Comparison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forthcoming)
- Bjørnskov, Christian. 2006. “Determinants of Generalized Trust: A Cross-country Comparison.” *Public Choice* 130: 1-21.
- Bjørnskov, Christian. 2010. “How Does Social Trust Lead to Better Governance? An Attempt to Separate Electoral and Bureaucratic Mechanisms.” *Public Choice* 144: 323-346.
- Bjørnskov, Christian and Mannemar Sønderskov. 2011. “Is Social Capital a Good Concept?” Working Paper
- Brehm, John, and Wendy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De Soto, F. 2000. *The Mystery of Capital*. New York: Basic Books.
- Delhey, Jan, and Kenneth Newton. 2003. “Who Trusts? The Origins of Social Trust in Seven Societies.” *European Societies* 5: 93-137.
- D’Hernoncourt, J., Méon, P. (2011). The not so dark side of trust: does trust increase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y?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1: 97-121.
- Fafchamps, M. and Minten, B. (2002). Returns to social network capital among traders. *Oxford Economic Papers*, 54, pp. 173-206.



- Guiso, L., Sapienza, P. & Zingales, L. (2004).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Financial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4(3), 526-556.
- Hardin, Russell. 1992. "The Street-Level Epistemology of Trust." *Analyse & Kritik* 14: 152-176.
- Jackman, Robert W., and Ross A. Miller. 1998. "Social Capital and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 47-73.
- Kaufmann, Daniel, Aart Kraay, and Massimo Mastruzzi. 2008. "Governance Matters VII: Aggregate and Individual Governance Indicators 1996-2007." Working Paper no. 4654.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 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Knight, Jack. 2001. "Social Norms and the Rule of Law: Fostering Trust in a Socially-Diverse Society." 354-373 in *Trust in Society*, edited by Karen Coo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umlin, Stephen, and Bo Rothstein. 2005. "Making and Breaking Social Capital: The Impact of Welfare-state Institu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8(4): 339-365.
-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1997. "Trust in Large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7(2): 333-338.
-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1999. "The Quality of Govern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5(1): 222-279.
- Lee, Dongwon. 2013. "How Does Social Capital Reduce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y?" *Global Economic Review*, forthcoming.
- Lee, Dongwon, and Heonjae Song. 2013. "Spillover effects of institutional trust and particularized trust on social trust." Working Paper.
- Levi, Margaret. 1998. "A State of Trust." 77-101 in *Trust and Governance*, edited by Valerie Braithwaite and Margaret Levi.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 Rothstein, Bo. 2000. "Trust, Social Dilemmas and Collective Memorie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2: 477-501.
- Rothstein, Bo, and Dietlind Stolle. 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Comparative Politics* 40(4): 441-459.
- Stolle, Dietlind. 2003. "The Sources of Social Capital." 19-42 in *Generating Social Capital*, edited by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Torgler, B., Schneider, F. (2007). Shadow economy, tax morale,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quality: a panel analysis. IZA Discussion Paper Series no. 2563.
- Uslaner, Eric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k, Paul J., and Stephen Knack. 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11 (April): 295-321.

## 부 록

〈표 A1〉 요약통계

	Mean	Standard deviation	Min	Max	Observations
가톨릭	32.92	36.40	0	96.9	79
지니계수	36.61	8.68	22.6	58.49	79
인당소득(\$ in 1,000)	13.39	12.30	0.21	54.15	79
군주제	0.16	0.37	0	1	79
이슬람	16.16	29.27	0	99.4	79
단체활동	11.68	6.74	0.9	31.84	74
구공산권	0.25	0.44	0	1	79
종교성	63.97	26.00	16	100	79
법의 지배	0.28	0.99	-1.36	1.98	79
교육	82.39	29.13	6	148	79
사회신뢰	25.84	15.17	3.8	74.2	79

〈표 A2〉 분석에 사용된 국가(영문)

Country	Country	Country
Albania	Greece	Philippines
Algeria	Guatemala	Poland
Argentina	Hong Kong	Portugal
Australia	Hungary	Romania
Austria	India	Russia
Bangladesh	Indonesia	Rwanda
Belarus	Ireland	Slovakia
Belgium	Israel	Slovenia
Bosnia and Herzegovina	Italy	South Africa
Brazil	Japan	Spain
Bulgaria	Jordan	Sweden
Burkina Faso	Korea	Switzerland
Canada	Kyrgyzstan	Tanzania
Chile	Latvia	Thailand
Colombia	Lithuania	Trinidad and Tobago
Croatia	Macedonia	Turkey
Cyprus	Malaysia	Uganda
Czech Republic	Mali	Ukraine
Denmark	Mexico	UK
Egypt	Moldova	US
Estonia	Morocco	Uruguay
Ethiopia	Netherlands	Venezuela
Finland	New Zealand	Vietnam
France	Nigeria	Zambia
Georgia	Norway	Zimbabwe
Germany	Pakistan	
Ghana	Peru	